리뷰논문 정보화정책 제17권 제1호, 2010년 봄호, pp.3~22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의 동향분석

김 유 정*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의 개괄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연구동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연구들을 메타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는 미디어 연구발전모델에서 비추어 볼 때 모든 영역에 적절하게 분포되거나 유형화되지 않고 거의 4영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터넷 관련 개념 확장 논의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한 연구방법은 질적인 방법 중 문헌고찰과 판례 및 법제 자료분석에 의존하고 있어 주로 탐색적 연구에 치중한 경향이 있으며 거의 이론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의된 세부적 주제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명예훼손, 음란물, 저작권, 유해정보, 청소년보호를 포함한 내용규제에 집중되었으며 사업규제에 관한 연구는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또한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는 법 · 제도 분석에 주력하여 사회문화 영역과 인터넷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주로 다룬 반면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는 미비하였다.

주제어: 인터넷정책연구, 인터넷규제연구. 인터넷법제연구, 인터넷연구동향, 인터넷메타분석

A Meta-Analysis of Internet-Related Policy Research in Communication

Yoojung Kim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and ascertained policy researches relating to the Internet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With using a meta-analysis,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44 academic papers from 2000 to 2009 by research theme, methodology, theoretic rationale, related sub-theme, and targeted service and area. It is found that the themes of preceding researches examined herein were limited to the 4th domain in Developmental Model of Media Research. Such researches mainly relied on exploratory studies and only a few of them addressed theoretic rationales. Also, most of Internet regulation discussions focused on content regulation and general internet service. Lastly, researchers discussed laws having bearing on the Internet and social-cultural issues of the Internet.

Keywords: internet policy, internet regulation, internet control, internet study, internet meta-analysis

2010년 3월 3일 접수, 2010년 3월 4일 심사, 2010년 3월 17일 게재확정
* 수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kyj33@suwon.ac.kr)

Ⅰ. 들어가는 말

정보화라는 새로운 화두가 제시되어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면서 이와 연계되어 있는 인터넷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신속하고 대량화된 유통과 그러한 정보로의 접근이 정보화의 의미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PC의 보급과 1990년대 초의 월드 와이드 웹 등장에 힘입어 인터넷 접속이 간편해지자 인터넷 이용은 급격히 확산되어 기존의 다른 미디어 이용 못지않게 일상화되었다. 그러자 다양한 영역에서 인터넷과 접목하고 주시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으며 학계에서도 연구대상으로 인터넷에 대해 관심이 커져 인터넷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특히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을 필두로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미디어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자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의 인터넷에 대한 관심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를 반영하여 1996년 Journal of Communication에는 "Why communication researchers should study the Internet"라는 특집 논문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주요 연구과제로 부상되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의 인터넷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주요 3개 저널에서 발표된 인터넷 관련 연구는 2000년에 들어 전체에서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은미 외, 2008). 이 수치는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영역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렇듯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인터넷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터넷 연구에 대한 분석 또한 시도되었다. 인터넷 연구동향 분석에서 많이 참조하는 Kim, et al. (2002)는 1996년에서 2000년까지 미국에서 발표된 인터넷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Kamhawi, et al. (2003)와 Tomasello(2001) 또한 메타분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인터넷 연구가 차지하는 정도 및 연구의 내용과 유형을 파악하였다. Kluver, et al. (2005)은 5년간 중국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분석하여 중국에서의 인터넷 연구의 현주소를 확인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오택섭(1997)의 인터넷관련 연구의 분석시도를 필두로, 황상재 외(2004)은 1999년에서 2003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인터넷 연구를 대상으로, 우형진(2005)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인터넷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김은미 외(2008)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언론학분야의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인터넷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메타분석을 동원하여 연구주제, 연구내용,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인터넷 연구의 현주소를 확인하였다.

특히 이들 국내 인터넷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제도와 정책연구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김은미 외, 2008: 우형진, 2005), 인터넷 관련 정책연구의 비중과 중요성이 간파되었다. 그 동안 인터넷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법, 경제, 정치, 행정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왔듯이 커뮤니케이션학에서도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른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논쟁거리가 있어 이에 관한 많은 지적과 고찰들이 있어왔다. 인터넷의 이음매없는 연결로 인한 국가 간의 영역상실, 법적용의 어려움,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적 논의개발의 한계, 기술융합에 따른 정체성혼란, 끊임없이 지속되는 업데이트와 빨리 소멸되는 콘텐츠, 새로운 개념의 출현 등은 많은 논의거리를 제시해주고 있다. 기존 미디어의 경우는 관련 규제정책이 이미 정착되거나 적용 또는 실행되고 있어 새롭거나 흥미로운 논쟁거리를 찾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인터넷의 경우 규제적용을 위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가 개

시될 때마다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인터넷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해석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속 진화하고 있는 인터넷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규제논의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논의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총체적인 인터넷 연구에 대한 동향을 확인하여 온 것처럼 인터넷 연구에서 주요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규제연구에 대해서도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 관련 연구는 그동안 초기의 CMC를 대상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 월드 와이드 웹 등장 후 인터넷 이용이 다양해지자 인터넷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감안하여 매스미디어로 인정하면서 정책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적절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인터넷 관련 연구들 중 규제정책 연구에 초점을 맞춰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최근에 들어 인터넷 관련 연구의 수가 양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다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다. 국외에서 인터넷 상에서의 젠더문제(Royal, 2005)나 온라인교육(Allen, et al., 2004)과 같이 국내에서도 온라인저널리즘(황용석, 2006)이나 질적 비판연구(강진숙, 2008)로 영역을 세분화하여 접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총체적인 인터넷 연구에 대한 동향분석에서 점차 세분화하거나 영역을 국한시킨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관련 연구들 중 규제정책 논의로 주제를 좀 더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터넷과 관련된 규제정책에 관심을 갖고 연구주제로 택해 규제의 의미를 논의하거나 분석한 연구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조명하고 관련된 연구주제, 이론적 배경, 분석방법 및 대상 등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논의함으로써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미디어 연구발전모델에 준한 연구유형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규제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어지는 관련연구에 참조되기를 바란다.

Ⅱ.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에 관한 논의

1. 인터넷에 대한 규제연구의 의미

미국 국방성의 프로젝트사업인 ARPANET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NETwork)로 시작된 인터넷은 초기에는 연구소와 특정 기관간의 연결망에서 점차적으로 기업, 행정, 교육 등의 조직과 가정으로까지 연결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초기에 군사용으로 시작되었다가 점차 연구 및 교육목적으로 전환되어 한정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정책 및 규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다 점차 적용영역이 넓어지고 상업성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규제 논의가 제기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인터넷의 기본 정신은 개방, 자유 공유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목적이 첫째 자유로운 정보공유 및 의사표현과 교류, 둘째 규제와 단속이 없는 자유로운 정보 흐름 및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보장,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원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획득, 유통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의미가 적용되지 않는 듯하였다. 출현 초기부터 규제를 적용하는 일반 미디어와는 달리 인터넷은 출현 시 표명한 개방, 자유, 공유의 개념이 규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인터넷에 관한 규제는 새로운 측면

으로 받아들여져 규제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모든 미디어는 초기에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면서 권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점차 일상화에 따른 영향력 증대와 상업성의 개입 등으로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날 경우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이다. 1995년 이후 그동안 연구실과 학교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인터넷이 일반 사무실과 가정으로의 이용확장에 주력함에 따라 인터넷의 확장에 중점을 두었다. 물론 이 당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서비스 이용이나 제공되는 콘텐츠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고 시기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다 상업성의 개입으로 인터넷의 근본취지가 수정되면서 인터넷은 확장에서 통제의 시대를 접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비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특정 영역으로 한정되어 활용되었던 시기에는 규제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지만 인터넷이 점차 대중화되고 상업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확장됨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 인터넷의 획기적인 발전과 확장에 따라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조직 내의 교류와 문화,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자 규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관심은 연구로 이어졌다. 즉, 인터넷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와 이용이 늘어남에 따른 다방면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져 이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규제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과 연관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에 대한 정립된 틀이 없어 틀을 정립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도 규제논의가 대두되었다. 초기의 단순한 텍스트 중심의 정보 및 메시지전달 기능에서 벗어나 대인간의 연결망이 심화되고, 온라인 상에서의 의사표현 및 참여가 강화되고, 인터넷과 접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었다.

그동안 미디어에 대한 규제정책의 근거는 공익성에서 찾았지만 미디어의 속성과 기능이 다른 인터넷에 대해 그 개념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미디어 규제정책에 있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규범적 근거, 현실적 근거, 논리적 근거이다(강형철, 2006). 기존의 미디어와는 달리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규제연구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규제가 기존의 미디어 규제와의 연속성을 이어가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기존의 미디어의 연속성 상에서 논의를 할 것인지 인터넷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규제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아 이러한 논지를 피력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즉, 기존 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적용의 한계가 부각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규제정책을 적용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델구축 작업부터 적용가능성여부 및 정당성논란 등의 많은 해결되지 않는 논쟁거리가 있어 문제점지적, 비판, 해결책 및 대안제시 등의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인터넷 관련 규제연구의 과제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규제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수용할 것인가, 규제적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와 새로운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따라서 인터넷 관련 규제연구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분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에서의 쟁점과 논의에 대한 개괄: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인터넷에 관한 규제연구는 기술, 산업, 내용, 이용자차원에서 논의되어왔다. 기술 관련 논의는 사회과학이 아닌 자연과학분야에서 접근하고 있어 본 논의에서는 제외된다. 기존의 인터넷 규제에 관한 연구들

을 총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규제정책을 위한 탐색

인터넷의 경우 그 특성상 기본적인 규제철학과 규제모델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는 한계성으로 인해 연계되는 규제방향 및 규제정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왔다. 그렇다보니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모색하기 위한 탐색적인 접근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강형철, 2006).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정착화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에 대비하고, 인터넷 특성을 부각하여 기존의 미디어와의 차별적인 정책도입을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인터넷에 적절한 대응책이 모색되었다(박성호, 2003). 또한 인터넷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단초가 되는 개념정립화 작업이 수행되어 인터넷에 대한 적절한 규제적용을 위한 틀을 마련하기 개념정의 및 영역설정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도 제시되었다(강형철, 2006; 권헌영, 2005; 박선영, 2000; 이근용, 2004). 이들 연구들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개념정의가 필요하듯이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존 체제와 관련 개념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2)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한 논의

인터넷을 표현의 자유가 진정하게 실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하여 내용규제는 인터넷 발전을 저해한다는 내용의 많은 비난과 반대에 봉착해왔다. 1996년 미국이 인터넷 외설물의 심각성을 감지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of 1996)법안을 제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초기의 인터넷 규제불가론에서 규제의 시대로 선회되었다. 특히 부적절하고 유해한 내용을 겨냥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내용규제에 관한 논의들이 본격화되었지만 여전히 내용규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내용규제에 관한 법적 해석이나 정책도입에 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이 연구에 반영되고 있다.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는 규제를 위한 접근방법과 유형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하여(최영훈, 2003), 인터넷상의 유해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정보차단을 위한 규제의 타당성과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김유정, 2008; 박선영, 2000; 서순복, 2003; 유의선, 2002; 이영음, 2003; 이재진 외, 2008; 홍명신, 2004). 또한 논의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특정 영역인 스팸메일(유의선, 2002; 홍명신, 2004)과 UCC(김유정, 2008)에 대한 규제적용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3) 어린이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음란물에 대한 내용규제 논의

인터넷 내용규제는 인터넷상에 있는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그 명분을 찾고 있다. 유해한 정보는 예술적, 문학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없이 단순히 음란적인 취미를 자극하고 표현이 극히 노골적이어서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관련연구들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보여주거나 성행위장면을 담고 있는 사진이나 음란한 장면들의 동영상인 그러한 음란물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음란물이 성인들보다 성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으면서 민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특히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강조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보호라는 관점에서 음란물은 신중하게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김경호, 2002; 김덕모, 2003; 김만섭, 2003; 유의선, 2002; 유의선 외, 2003; 조연하, 2004, 2005). 따라서 이들 연구들은 청소년 유해물의 영향과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기존의 법제도 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4)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

자율규제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터넷상에서 유포 또는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자들의 자발적인 등급표시를 권장하거나 불법정보를 차단 또는 선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도록 인터넷 사용과 운영을 민간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일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 규제모델로 자율규제가 부각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율규제에는 동의하고 있어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의 주 관심사는 자율규제제도의 정당성과 운영방법을 서술하고 자율규제를 정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김기태, 2003; 김만섭, 2001; 2003; 김유승, 2005; 2006; 황상재, 2000). 또한 보다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추진하기 위해 김유승(2005; 2006)은 대안적 규제방안으로 자율규제와 공동규제의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김기태(2003)는 미디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5)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 논의

대부분의 명예훼손은 일정한 통제체계나 여과장치를 통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생산되고 유포되는 정보로 인해 야기된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을 담보로 자신의 실체를 숨긴 채 상대의 명예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터넷은 누구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 생각, 그리고 사상을 자유로이 표현하고 전달하는 자유의 공간을 추구한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기존의 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지적되었다(이재진, 2000; 2003; 2007). 이러한 문제점은 표현의 자유와 연계되어 있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라는 상충된 문제에 대한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명확한 한계 및 정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를 비롯한 규제대상자 설정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연계된 명예훼손 규제에 관한 연구는 총체적인 모델을 정립하기 보다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를 사례중심으로 풀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여 인격권을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재진, 2000; 2001; 2003; 2004; 2007).

6) 저작권 논의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 소유된 권리는 없다는 개방적인 해석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화되었다. 디지털 콘텐츠는 기존의 콘텐츠와는 달리 쉽게 합성 또는 복제하여 유포시킬 수 있어 무단복제나 무단이용에 대한 주요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관리와 유통을 위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적인 보완책 마련과 동시에 디지털 정보유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을 하여, 공유사이트의 온라인 저작권(고홍석 외, 2008), 국제간의 디지털 정보교류로 인해 야기되는 저작권(방석호, 2007a),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검색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방석호, 2007b), 디지털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안종묵, 2006), 인터넷을 통한 전송에 대한 저작권(이영주, 2009), 온라인 뉴스에 대한 저작권(이영주 외, 2005; 이재진 외, 2008), UCC 제작시 침해되는 방송 저작권(이재진 외, 2007)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논의하고 저작권 침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 또는 적용될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저작권 법조항 및 저작권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고찰하고 있다.

7) 규제대상자 논의

인터넷에서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 정보를 제공(생산)하는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 이용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정보유통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모두가 정보생산과 유통과정에 관여하고 있어 책임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미디어 운영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규제와는 차별화 된 규제모델이 요구됨에 따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규제정책을 적용하느냐를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한 규제대상자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인터넷에서의 규제대상자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성을 규명하기 위한 규제논리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인 책임의 기준설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원칙 및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김만섭, 2003; 이재진, 2001; 황성기, 2007a; 2007b).

8) 이용자 복지를 위한 정책 논의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미디어에 대한 수용자의 접근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용자 복지의 중요성이 거듭 제기되었다. 인터넷 보급률의 확대로 디지털 격차문제가 파생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격차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비롯한 이용자복지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점검하고자 하였다(강진숙, 2002; 안정임, 2006).

9) 산업적 접근에 의한 사업규제 논의

인터넷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규제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산업 간의 경쟁촉진 및 공정경쟁관리, 수익모델창출과 관련된 바람직한 규제방향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여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실행가능한 정책이 검토되었다(송진 외, 2008; 오정호, 2004; 이화행, 2004; 최선규, 2009).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인터넷은 통합적 미디어로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접근이 있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미디어측면에서 접근하는 커뮤니케이션학 영역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주요 저널들에 게재된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에 관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에서 논의된 연구주제, 연구방법, 이론적 배경, 규제관련 세부주제, 영역, 연구의 목적, 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1.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에서 다룬 주제는 미디어 연구발전모델에서 어떠한 유형을 나타내는가?
2.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는 어떠한 연구방법을 동원하였는가?
3.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에서는 어떠한 이론을 적용하였는가?
4.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에서는 규제와 관련된 어떠한 세부 주제를 연구하였는가?
5.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는 규제와 관련하여 어떤 영역을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는가?
6.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에서의 연구목적 및 의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7.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는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논의대상으로 하고 있

는가?

2.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주요 저널에 발표된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를 분석하는 데 있으므로 메타분석방법을 동원하였다. 메타분석은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동원하는 연구방법 중 하나이며 탐색적으로 연구동향을 기술하기보다는 선행된 관련 연구들을 정립된 기준을 통해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연구의 규칙성을 갖는 장점이 있다. 메타분석은 연구의 전반적인 주제와 방법을 분석하는 종합적 메타분석과 특정된 하나의 개념이나 주제에 관해 분석하는 분석적 메타분석으로 분류된다(Wallace, 1992). 인터넷 전반에 걸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종합적인 메타분석을, 인터넷 관련 연구 중 특정 영역에 한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적인 메타분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2000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저널인 「한국언론학보」, 「한국방송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방송통신연구」, 「언론과학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정보화정책」에 게재된 논문들 중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1단계로 각 학회 및 발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저널의 게재논문 제목과 키워드를 모두 전수 조사하였다. 이때 인터넷, 온라인, 사이버, 가상공간, 웹, 포털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하였으며 2단계로 추출된 논문의 초록 및 내용을 직접 검토하여 관련논문들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와 「정보화정책」과 같은 학제 간 연구지의 경우, 인터넷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있어 초록과 내용을 읽은 후 자료선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한국언론학보」 11편, 「한국방송학보」 7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6편, 「한국언론정보학보」 1편, 「언론과학연구」 3편, 「방송연구(방송통신연구)」 4편, 「정보화정책」 2편으로 총 44편이 추출되었다. 황상재 외(2004) 연구에서는 총 134편이, 우형진(2005)의 연구에서는 총 245편이, 김은미 외(2008) 연구에서는 총 222편의 논문들이 분석되었다. 이들은 인터넷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많은 편수를 찾을 수 있은 반면에 규제연구로 세분화할 경우 분석대상 편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대인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은유에 관한 연구를 한 총 24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한 경우도 있어 편수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Wallace, 1992). 추출된 총 44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정리된 분류기준별로 코딩하여 그 결과를 계량화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3. 분류방법 및 분류단위

1) 미디어 연구발전모델에 따른 연구주제

새로운 미디어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김은미 외, 2008; 송종길 외, 2009; 우형진, 2005; 황상재 외 2004)은 연구주제를 미디어 연구발전모델(Wimmer et al., 2000)에 근거하여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 또한 이 모델을 참조하였다.

위머 외(2000)는 미디어 연구발전모델을 4단계의 영역으로 지정하였다. 1영역은 미디어 자체에 관심을 갖고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접근 또는 탐구이며 미디어에 대한 법제도적, 철학적, 개념적, 산업적, 기술적, 서비스적인 의미, 현황, 영역설정에 대한 관심이 포함된다. 2영역은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와 이용자들에 관한 것으로 산업적 접근, 수용자, 내용, 교육도구로서의 이용, 민주주의 도구로서의 이용, 저널리즘 도구로서의 이용, 웹사이트 평가에 관심을 갖는다. 3영역은 미디어 이용에 대한 효과 및 영향에 관한 것으로 개인, 조직, 공동체, 국가, 사회문화차원에서의 효과와 기존 미디어와의 관계 및 영향을 논의하는 단계이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 심리적 · 물리적 효과, 새로운 미디어 출현으로 인한 사회문화,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4영역에서는 미디어 개선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새로운 미디어 출현과 관련된 미디어의 기술적인 개선,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개발, 국제간 기술 및 내용, 새로운 미디어에 적용할 관련 개념 확장, 조사방법론 개발이 해당된다. 특히 이 영역은 새로운 미디어 출현과 확산에 따른 이해와 해석 및 정책 및 규제적용을 위한 개념 및 모델 정립을 포함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에서의 연구주제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영역. 인터넷 자체에 관한 영역: 인터넷 자체 고유의 영역, 현황, 기술, 역사, 기능(분석대상이 및 규제연구로 한정되어 있어 정책과 제도는 이 영역에서 배제되었다)

2영역. 인터넷 이용 및 이용자 관련 영역: 인터넷이 미디어로서 서비스하기 위한 필요한 산업적 접근, 수용자, 내용, 교육도구로서의 이용, 민주주의 도구로서의 이용, 저널리즘 도구로서의 이용, 웹사이트 평가

3영역. 인터넷 이용에 따른 영향 및 효과: 개인, 조직, 공동체, 국가, 사회문화, 전통미디어에 대한 영향, 부정적 효과, 타미디어에 대한 영향

4영역. 인터넷에 대한 개선: 인터넷 출현과 확산으로 인한 기술개선, 새로운 콘텐츠 제작 및 개발, 국제간 기술 및 내용협약, 새로운 정책 및 규제적용을 위한 개념 및 모델 정립

2) 연구방법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을 크게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으로 크게 분류한 다음 세분화하였다. 분류기준으로 제시된 연구방법에는 사례, 내용, 민속지학적, 철학적, 기호학적, 미학적, 정신분석학적, 담론, 이데올로기 분석과 현상학, 해석학적 자료 및 문헌고찰, 설문조사, 2차 자료조사, 참여관찰, 실험연구, 심층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가 있다(강진숙, 2008; 우형진, 2005). 이 연구 또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일반 연구와는 달리 기존의 규제정책 연구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참조하여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 실증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한 경우는 양적 분석으로, 문헌이나 사례에 의존한 기술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질적 분석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 양적 분석에는 내용분석, 설문조사, 2차 자료분석, 실험연구가 포함되며 질적 분석에는 문헌고찰, 판례분석, 사례연구, 현안 및 이슈분석, 심층면접, 포커스그룹면접이 포함되었다.

3) 이론적 배경

선행 분석연구에서 질적 연구인 경우 약 97%가 특정 이론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듯이(Kim, et al., 2002) 규제정책 연구에서는 이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논문에서 거론하거나 적용한 이론에 따라 분류하였다. 커뮤니케이션학 영역에서의 인터넷 관련 연구로 한정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분류되었다.

4) 규제 관련 세부주제

선행된 인터넷 관련 규제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검토하였으며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규제 관련 세부주제를 내용규제일반, 표현의 자유,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음란물, 저작권, 유해정보, 청소년 보호, 이용자복지, 사업규제일반, 융합정책, 기타로 분류하였다.

5) 규제정책 적용 영역

규제연구에서 기존의 법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적 제언을 할 경우, 적용영역을 설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규제연구에서 논의된 적용대상 영역을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개인, 국제, 기타로 분류하였다.

6) 규제정책 연구에서의 연구목적 및 의도

대부분의 규제연구들은 법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제언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연구자가 피력한 연구목적 및 의도는 크게 분석과 제언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명문화된 법령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법 · 제도 분석과 법제도에 대한 제언으로, 실행 또는 적용되는 규제정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정책분석과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분류하였다.

7) 인터넷 관련 서비스

우형진(2005)은 인터넷연구에서의 관심을 두는 서비스로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PC통신/이메일, 배너, 게시판, 아바타, 홈페이지/웹사이트, 사이버공간, 기타로 지정하였다. 강진숙(2008)은 인터넷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미디어를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UCC, 게시판, 댓글, 전자우편, 아바타, 웹사이트, 인터넷자체, 블로그, 기타로 분류하였다.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논의하는 연구와는 달리 규제연구에서는 모든 인터넷 관련 서비스가 해당되지 않으며 규제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서비스로 한정된다. 그 이유는 규제논의가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규제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일반, 웹사이트, 인터넷방송 및 IPTV, 인터넷신문, 포털, 게시판, 이메일 또는 커뮤니티, UCC로 분류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커뮤니케이션학에서의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 현황

2000년에서 2009년까지 국내 커뮤니케이션 관련 학술지에서 게재된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는 총 44편이었다(〈표 1〉 참조). 「사이버커뮤니케

〈표 1〉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의 연도별 분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
한국언론학보			3	1	2	2			2	1	11 (25)
한국방송학보		1	1		3			1	1		7 (15.9)
한국언론정보학보							1				1 (2.3)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		1	5		1	2	3	1		16 (36.4)
언론과학연구				2			1				3 (6.8)
방송통신연구				1				2		1	4 (9.1)
정보화정책				1		1					2 (4.5)
합계(%)	3 (6.8)	1 (2.3)	5 (11.4)	10 (22.7)	5 (11.4)	4 (9.1)	4 (9.1)	6 (13.6)	4 (9.1)	2 (4.5)	44 (100)

이션학보」가 총 16편(3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학술지에 비해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에 관한 주제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언론정보학보」는 이 기간에 단 1편이 게재되어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른 해에 비해 2003년(22.7%)에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표된 것을 알 수 있다.

2. 미디어 연구발전모델에 준한 연구유형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가 미디어 연구발전모델에서 어떤 유형을 나타내는가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는 각 영역에 적절하게 분포되거나 유형화되지 않고 거의 4영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자체는 2편(4.6%), 인터넷 이용과 이용자는 8편(18.1%), 인터넷 효과는 1편(2.3%)으로 저조한 반면에 인터넷 개선은 33편(75%)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 영역에 치중하여 연구한 경향이 강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관련 개념 확장에 관한 연구가 32편(72.7%)로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의 3분의 2정도를 차지하였다. 인터넷 관련 개념 확장에 관한 연구는 2001년에는 1편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인터넷 자체에 대한 현황, 특성, 기능, 서비스를 파악하는 연구, 인터넷 이용과 이용자에 관한 연구, 인터넷 이용에 따른 효과 및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는 미비하게 수행되었다. 인터넷 이용과 이용자에 있어 수용자와 내용에 관한 연구가 다소 있는 것은 내용규제를 위한 연구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의 분석연구(우형진, 2005)에서도 인터넷 관련 법, 정책, 규제, 윤리에 관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지적된 것처럼 본 연구의 대상이 규제정책이어서 특히 4영역 관련 연구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4영역은 미디어 이용이나 기술에 대한 개선이나 새로운 접근의 수용에 관한 영역으로 미디어발전을 예측하거나 새로운 미디어 기술, 기능, 예견하고 이와 관련된 개념정의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미디어 정책 수립을 제시하는 연구가 포함되므로 정책연구에서는 중요한 영역이다.

우형진(2005)은 인터넷에 관심을 갖는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4영역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4영역의 연구주제들이 이론적인 검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인터넷에 관한 정책 논의를 위한 탐색적 연구에는 많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정책연구에서는 새로이 적용해야 할 정책수립과 제안을 위해 새로운 개념정의, 기존 개념의 수정보완, 기존 개념의 확대적용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인터넷을 풀이하는 용어에 대한 해석 및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저작권, 인격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논의를 위한 관련 의미규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관련 개념을 연구하는 경향이 많았던 점이 〈표 2〉에 나타난 연구추이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3. 동원된 연구방법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에서 동원된 연구방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양적 방법이 6편으로 10%에 불과해 주로 질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적인 방법 중에서도 주로 문헌고찰(41%)과 판례 및 법제 자료분석(33%)에 의존하였다. 규제정책 연구가 법제도나 정책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제언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 2〉의 결과에도 있듯이 규제연구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연구를 거의 하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의 양적인 방법은 거의 동원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1995년부터 2005년의 20년간 인터넷

〈표 2〉 미디어 연구발전모델에 근거한 영역별 연구유형 분포 (2000-2009)

	연구주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
1 영역미디어 자체	인터넷 현황, 특성, 기술적 의미				1							1 (2.3)
	인터넷 역사, 철학적 의미					1						1 (2.3)
	인터넷기능, 서비스											
2 영역미디어 이용 및 이용자	인터넷 산업적 접근					2						2 (4.5)
	인터넷 수용자			1	1			1				3 (6.8)
	인터넷 내용			1						1		2 (4.5)
	교육도구로서의 인터넷 이용											
	민주주의도구로서 인터넷 이용											
	저널리즘도구로서 인터넷 이용				1							1 (2.3)
	웹사이트평가											
3 영역미디어 효과	개인관련 효과				1							1 (2.3)
	조직관련 효과											
	공동체 관련효과											
	국가관련 효과											
	사회문화적 영향											
	부정적 효과											
	타미디어에 대한 효과											
4 영역미디어 개선	인터넷 기술적 개선											
	새로운 콘텐츠제작/개발											
	국제간기술/ 내용 협약								1			1 (2.3)
	인터넷 관련개념 확장	3	1	3	6	2	3	4	4	4	2	32 (72.7)
	인터넷관련 조사방법개발											
합계(%)		3 (6.8)	1 (2.3)	5 (11.4)	10 (22.6)	5 (11.4)	3 (6.8)	5 (11.4)	5 (11.4)	5 (11.4)	2 (4.5)	44 (100)

〈표 3〉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에서 동원한 연구방법(중복 코딩)

연구방법		합계(%)
양적 연구	내용분석	1(2)
	설문조사	2(3)
	2차 자료분석	2(3)
	실험연구	1(2)
질적 연구	문헌고찰	24(41)
	판례분석	19(33)
	사례연구	5(9)
	현안분석	3(5)
	심층면접	1(2)
합계(%)		58(100)

연구의 80%가 탐색적 연구에 치중했다는 우형진(2005)의 연구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또한 방송통신융합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에 접근하는 연구에서 새로운 모델을 추론하려는 논문이 적었다는 김성태(2009)의 지적처럼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론적 배경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에서 적용한 이론에 대한 분석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이 부분은 정책연구에서 취약한 부분이다. 이론을 도입한 연구는 단지 4편으로 전체 연구 들 중 약 10%에 불과하다. 이는 〈표 2〉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 이용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연구가 거의 배제되어 있어 이론적 논의 또한 배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정책 연구가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이를 검증하여 이론적 모델을 정립하기 보다는 기존의 문헌을 고찰 또는 분석한 자료에 근거하여 정책 및 규제를 비판하거나 제안하는 탐색적 논의에 주력하고 있어 이론을 거의 도입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관련된 이론을 참조 또는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논의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5. 규제관련 세부주제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에서 다룬 규제관련 세부 주제들을 분석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 4〉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에서 적용한 이론 (중복 코딩)

이론	합계(%)
이용과 충족이론(Use and Gratification Theory)	1(25)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1(25)
정화가설(Catharsis Hypothesis)	1(25)
지식격차가설(Knowledge Gap Hypothesis)	1(25)
합계(%)	4(100)

〈표 5〉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에서 논의된 세부주제 (중복 코딩)

		관련 법령	제도 및 기구	미디어 정책	합계(%)
내용 규제	내용규제일반	2	5	6	13(20)
	표현의 자유	4			4(6.2)
	프라이버시/명예훼손	7		1	8(12.3)
	음란물	3		5	8(12.3)
	저작권	7		1	8(12.3)
	유해정보		3	1	4(6.2)
	청소년보호	3		3	6(9.2)
사업 규제	사업규제일반	2	1	3	6(9.2)
	융합			2	2(3.1)
이용자 복지				3	3(4.6)
기타		2		1	3(4.6)
합계(%)		30(46.2)	9(13.8)	26(40)	65(100)

내용규제 일반이 13편(20%)로 가장 많았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명예훼손, 음란물, 저작권, 유해정보, 청소년보호를 포함할 경우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가 78.5%를 차지하고 있어 인터넷 규제연구는 주로 내용규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사업규제는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내용규제 중에서도 아직 정립되지 않고 논쟁중인 인격권에 관한 프라이버시 및 명예훼손, 저작권, 음란물에 관한 논의가 각각 8편(12.3%)을 차지하고 있어 내용규제 논의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세부주제에 대해 분석 및 제언의 대상은 관련 법령 30편(46.2%)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디어 정책 26편(40%), 제도 및 기구 9편(13.8)의 순이었다. 인터넷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해 기존의 관련개념을 수정보완 또는 새로이 적용하기 위해 우선되는 작업은 법령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책 및 규제를 적용하거나 제안하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법령에 대한 논의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관한 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디어정책은 관련 법령과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인격권과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는 인터넷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법적 개념 및 항목이 설정된 후에 이를 토대로 정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주로 법령에 관해 논의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6. 규제정책 적용 대상영역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에서의 대상영역에 관한 분석은 〈표 6〉에 표시되어 있다. 규제연구의 대상영역은 규제정책의 논의대상 및 적용영역을 뜻한다. 분석결과, 사회문화영역이 22편(47.8%)으로 절반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경제가 14편(30.4%), 개인이 8편(17.4%)이었다. 사회문화 영역에 관한 연구는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경제적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정책 연구는 최근에 들어 거의 연구되지 않는 변화를 보였다. 인터넷 확산과 이용으로 인해 사회문화적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표 6〉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에서 논의된 영역 (중복 코딩)

적용영역	합계(%)
정치	1(2.2)
경제	14(30.4)
사회문화	22(47.8)
개인	8(17.4)
기타	1(2.2)
합계(%)	46(100)

규제를 연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연계된 영역들 중에서 사회문화적 영향을 중요시하고 있어 이를 관리 또는 통제하기 위한 규제정책 논의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7. 규제정책의 연구목적 및 연구의도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의 연구목적 및 의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의 연구목적과 의도는 법 · 제도 분석(39.4%)에 가장 많은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법제도 정비를 위한 제언(30.1%), 정책제안(22.5%)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는 인터넷과 관련된 법제도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제언하는 데 가장 많이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제안을 위한 연구(22.5%)도 다수 이루어졌으나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5.2%)는 미비하였다.

법제도와 정책에 관한 분석이나 제언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3분의 1정도는 산업을 대상(32.4%)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제도연구에서 개념정의를 중요시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인터넷에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할 법제도를 논의함에 있어 개념정의부터 정립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8. 인터넷 관련 서비스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되는 미디어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는 인터넷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7편, 57.3%)을 포괄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었다. 이와는 달리 인터넷방송/IPTV(12.8%)와 게시판(8.5%)에 관한 연구가 다수 있을 뿐 웹사이트, 이메일, UCC, 포털, 인터넷신문을 겨냥한 연구는 6% 이하에 그칠 정도로 미비하였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서비스되고

〈표 7〉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의 연구목적 및 의도에 대한 분석 (중복코딩)

	산업	콘텐츠	이용자	개념정의	기타	합계(%)
법 · 제도분석	9	7	5	7		28(39.4)
정책분석	2	1				3(5.2)
법제도 제언	6	4	6	5	1	22(30.1)
정책 제언	6	4	4	1	1	16(22.5)
기타			2			2(2.8)
합계(%)	23(32.4)	16(22.5)	17(23.9)	13(18.4)	2(2.8)	71(100)

〈표 8〉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의 관심 미디어와 관련 영역 (중복코딩)

	경제	사회/문화	개인	합계(%)
인터넷 일반	3	19	5	27(57.3)
웹사이트	2		1	3(6.4)
인터넷방송/IPTV	5	1		6(12.8)
인터넷신문		1		1(2.1)
포털	1	1		2(4.3)
게시판			4	4(8.5)
이메일/커뮤니티		1	1	2(4.3)
UCC	1	1		2(4.3)
합계(%)	12(25.5)	24(51.1)	11(23.4)	47(100)

〈표 9〉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의 관심 미디어와 논의대상 (중복코딩)

	사업/산업	콘텐츠	이용자	개념정의	합계(%)
인터넷 일반	8	11	10	4	33(55)
웹사이트	1	1	1	1	4(6.7)
인터넷방송/IPTV	5	1			6(10)
인터넷신문		1			1(1.7)
포털	2	1		2	5(8.3)
게시판			4	2	6(10)
이메일/커뮤니티	1	1		1	3(5)
UCC	1	1			2(3.3)
합계(%)	18(30)	17(28.3)	15(25)	10(16.7)	60(100)

있는 각 미디어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인터넷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황상재 외(2004)의 연구결과와 같이, 기존의 미디어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거나 매스미디어적 성격이 강한 인터넷방송/IPTV에 대한 관심이 대인 커뮤니케이션 용도인 이메일과 게시판보다 더 많았다. 대인간의 의사교류와 관계맺기를 위해 이용하는 인터넷상의 서비스는 법제도적인 정책이나 규제적용 논의가 그만큼 덜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인터넷 자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이 중에서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감안한 사회문화영역에 대한 접근이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석 및 논의의 대상으로 콘텐츠가 33%, 이용자가 30%, 사업/산업이 24%이었다. 산업적인 특성이 강한 인터넷방송/IPTV와 포털의 경우 경제와 사회문화적인 관심이 주된 반면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게시판과 이메일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와 개인적인 관심이 많이 반영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관련 연구들은 인터넷방송/IPTV와 포털에 대해서는 산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게시판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새로운 규제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포털과 게시판에 대한 개념정의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다른 연구에 비해 많이 시

도되었다.

Ⅴ. 맺는 말

이 연구의 의도는 최근 10년간의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 인터넷 규제연구가 어디에 관심을 보이거나 중점을 두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인터넷 확장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관한 논의는 최근에 부각되었기 때문에 최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학술지에 발표된 총 4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가 미디어 연구발전모델에서 어떤 유형을 나타내는가를 조사하였다. 지난 10년간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는 각 영역에 따라 적절하게 분포되거나 유형화되지 않고 거의 4영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터넷 관련 개념확장에 관한 연구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에서 동원한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 질적인 방법 중 문헌고찰과 판례 및 법제자료 분석에 주로 의존하는 탐색적 연구에 치중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에서 적용한 이론에 대한 분석결과, 정책연구에서 이론적 배경부분이 취약하다는 지적처럼 이론을 도입한 연구는 단지 4편에 그쳐 추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넷째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에서 다룬 규제 관련 세부 주제들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명예훼손, 음란물, 저작권, 유해정보, 청소년보호를 포함한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가 주도적이었으며 사업규제에 관한 연구는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부주제에 대해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및 제언을 위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미디어 정책에 관한 연구였다. 다섯째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의 절반 정도는 사회문화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다음이 경제, 개인의 순이었다. 여섯째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의 연구목적과 의도는 주로 법 · 제도 분석에 있으며 그 다음으로 법제도 정비를 위한 제언과 정책제안에 관심을 가졌다. 일곱째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는 인터넷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었다. 인터넷과 연계된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는 미비하였다. 또한 인터넷 자체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감안한 사회문화영역에 대한 접근이 많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는 여러 주제를 대상으로 다양한 접근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는 탐색과정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대상으로 새로이 개념이나 규제모델을 정립해야 하는 부담이나 인터넷 특성으로 인해 명확한 개념이나 모델을 제시할 수 없거나 인터넷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제방향과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적 한계로 인해 지난 10년간의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넷에 적용하는 규제는 새로이 정립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변화된 논의들을 제시하거나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타미디어와는 다른 차별적인 접근을 위한 새로운 개념정의와 이에 따른 정책방향 제시, 규제모델정립, 해결방안제시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정의 정립이 선제되어야 하므로 인터넷 관련 개념 확장에 관한 연구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미디어 출현과 확산과정에서 위머 외(2000)가 제시한 미디어 연구발전모델이 순차적으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물론 초기단계에서는 순차적으로 전개되기도 하지만 일단 미디어가 확산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다. 미국에서의 인터넷 관련 연구에서는 1, 2영역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3, 4영역의 연구도 2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미디어 연구발전모델은

시간경과에 따른 순차적인 진행이 아니며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Kim, et al., 2002). 그러나 인터넷 일반에 관한 연구와 인터넷 관련 정책연구는 성격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국내 인터넷 관련 정책연구는 순차적으로 전개되는지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4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것만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방법과 이론적 배경은 취약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탐색적 논의에 그치고 있었다. 정책연구들이 자칫 예측적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거나 진단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연구경향이 반영된 것 같다. 특히 논쟁적인 이슈나 연구주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인해 기존의 문헌연구에 따른 기술과 탐색에 의존하는 듯하다. 이는 김성태(200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모델이나 가설을 추론하려는 학술적 연구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내용규제에 연구관심이 치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산업적 규제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규제에 관한 논의가 더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내용규제를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인터넷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통제에 관한 관심이 연구로 이어져 다른 영역에 비해 사회문화적 영역에 좀 더 활발한 경향이 있었다.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인터넷 일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을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포괄적 논의가 많을 뿐이며 최근의 출현한 새로운 서비스인 UCC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다루지 못한 한계점도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적인 발전의 속도를 정책연구가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나 현실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인터넷 관련된 실질적인 변화에 맞춰 규제연구도 변화되어 온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기별로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에 대한 추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규제연구에서의 영역의 확장이 되었으면 한다. 그 외에 이 연구의 제한점을 꼽자면 우선 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나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분석논문 수가 44편이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분포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변화를 추이를 간파하기가 적절하지 않아 변화의 추이는 살펴보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분석의 기준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연구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편의상 기술적인 기준에 의존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통계적 수치에 근거한 외적인 설명에 치중하게 되는 오류가 생기게 된다. 이 연구 역시 그러한 오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진숙 (2002). “인터넷 네트워크의 정보격차 현황과 대응정책 연구: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4): 5-45.

강진숙 (2008). “국내 인터넷 연구의 주제와 방법에 대한 메타 분석: ‘인터넷 비평’ 유관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2): 173-198.

강형철 (2006). “사이버 커뮤니티와 공익.”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7: 5-46.

고흥석 · 박재영 (2008). “온라인저작권 소송 사례 비교분석: 한국의 소리바다와 미국의 그룩스터(Grokster) 판결의 경우.” 「한국언론학보」, 52(1): 31-57.

권헌영 (2005). “웹캐스팅 규제에 관한 법제적 쟁점.” 「정보화정책」, 12(4): 150-164.

김경호 (2002).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과 사이버 상에서의 성표현의 허용범위.” 「한국언론학보」, 46(2): 33-66.

김기태 (2003). “청소년들의 인터넷 자율규제 추진방안 연구: 미디어교육과 민간자율감시운동을 중심으로.”「언론과학연구」, 3(1): 5-32.

김덕모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행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언론과학연구」, 3(3): 5-50.

김만섭 (2001). “인터넷방송의 자율규제에 대한 과정평가.”「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9:5-37.

김만섭 (2003). “인터넷상에서의 민간자율규제의 구성에 관한 분석 틀 검토: 유해정보 규제 주체자의 합리적 선택모형.”「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1: 71-104.

김성태 (2009).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제언.”「방송통신연구」, 68: 86-109.

김유승 (2005). “인터넷 콘텐츠 공동 규제: 유럽연합의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증진을 위한행동계획”을 중심으로.”「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6: 83-116.

김유승 (2006). “인터넷 공간의 자유와 규제: 공공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20: 85-117.

김유정 (2008). “UCC와 내용규제: 부적절한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적용한 규제 논의.”「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2): 263-293.

김은미 · 나은경 (2008).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인터넷 관련 연구 10년: PC통신에서 웹2.0까지.”「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1): 243-287.

박선영 (2000).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을 중심으로.”「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6: 5-32.

박성호 (2003). “인터넷 미디어의 사회문화적 충격과 정책방향.”「정보화정책」, 10(1): 40-61.

방석호 (2007a).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문제: 한미 FTA를 중심으로.”「방송연구」, 65: 7-25.

방석호 (2007b). “포털의 검색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문제 분석.”「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 39-67.

서순복 (2003).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통해서 본 법리의 발전경과.”「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1: 105-146.

송종길 · 황성연 (2009). “방송통신융합시대 미디어 연구의 경향; 2000년이후 기존 연구분석을 중심으로.”「방송통신연구」, 68: 110-132.

송진 · 유의선 (2008). “공정경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분석: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4조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52(3): 441-461.

안정임 (2006).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자 복지 정책적 함의.”「한국언론정보학보」, 36: 7-108.

안종묵 (2006). “저작권법 재점검을 통한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에 관한 고찰.”「언론과학연구」, 6(4): 243-284.

오정호 (2004). “인터넷인프라 규제의 국제비교연구.”「한국방송학보」, 18(2): 5-35.

오택섭 (1997). “인터넷 연구의 영역과 현황 및 과제.”「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 6-28.

우형진 (2005). “국내 인터넷 연구의 발전적 모색: 1995-2005년까지 커뮤니케이션 학술지에 게재된 인터넷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커뮤니케이션이론」, 1(1): 332-365.

유의선 (2002). “인터넷상의 스팸메일 법적 규제 정비방향: 관련 변인 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46(3): 153-182.

유의선 · 조연하 (2003).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의 위법성 구성 및 조각에 대한 연구: 한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47(5): 65-86.

이근용 (2004). “인터넷 미디어의 규범적 이미지 논의.”「한국언론학보」, 48(1):310-336.

이영음 (2003). “사이버 공동체에서의 윤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2: 187-220.

이영주 (2009). “지상파 라디오방송의 인터넷 동시 전송에 대한 법적 분류와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 고찰.”「한국언론학보」, 53(3): 221-240.

이영주 · 송진 (2005).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의 이용약관에 관한 연구: 계약적 구속력과 저작물 이용 허용범주를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49(6): 373-400.

이재진 (2000).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6: 104-146.

이재진 (2001).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비교법제적 연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을 중심으로.”「한국방송학보」, 15(2):

303-342.
이재진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연구: 한미간의 판례고찰을 중심으로.”「방송연구」, 57: 235-270.
이재진 (2004). “사생활 침해 판례에서 나타난 면책사유의 가상공간에의 적용성 연구.”「한국방송학보」, 18(4): 246-278.
이재진 (2007).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한국방송학보」, 21(5): 127-162.
이재진 · 구본권 (2008).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잊혀질 권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한국방송학보」, 22(3): 172-210.
이재진 · 박성복 (2007). “UCC의 방송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찰: 공정이용과 OSP 책임성을 중심으로.”「방송연구」, 65: 59-82.
이화행 (2004). “민영방송사의 인터넷방송 특성과 전략 연구: 독일 RTL의 경영, 조직, 콘텐츠, 수익모델 측면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48(3): 195-221.
조연하 (2004).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의 인터넷 유통단계별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한국방송학보」, 18(4): 227-270.
조연하 (2005). “인터넷상의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의 침해법익에 관한 연구.”「한국언론학보」, 49(1): 81-107.
최선규 (2009). “융합미디어의 규제정책: 네트워크 규제와 서비스규제를 중심으로.”「방송연구」, 68: 49-85.
최영훈 (2003). “주요국의 인터넷내용규제법제: 싱가폴을 중심으로.”「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2: 5-38.
홍명신 (2004). “미국 스팸메일 법제에 관한 연구.”「한국방송학보」, 18(1): 5-37.
황상재 (2000). “인터넷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지율규제를 중심으로.”「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6: 299-322.
황상재 · 박석철 (2004). “국내 인터넷 연구의 메타분석: 연구주제와 방법을 중심으로.”「한국방송학보」, 18(2): 68-92.
황성기 (2007a).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1: 197-232.
황성기 (2007b).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법2007.5.18. 1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의 평석을 중심으로.”「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 149-188.
황용석 (2006). “한국 온라인저널리즘 연구의 주제와 접근방법에 대한 메타분석.”「커뮤니케이션이론」, 2(1): 128-167.
Allen, M., Marby, E., Bourthis, J., Titsworth, S. & Burell, N. (2004).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Distance Learning; A Comparison Using Meta-Analysis.” *Journal of Communication*, 54: 402-420.
Kamhawi, R. & Weaver, D. (2003). “Mass Communication Research Trends from 1980 to 1999.”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1): 7-27.
Kim, S. T. & Weaver, D. (2002). “Communication Research about the Internet: A Thematic Meta-Analysis.” *New Media & Society*, 4(4) : 518-538.
Kluver, R. & Yang, C. (2005). “The Internet in China; A Meta-Review of Research.” *The Information Society*, 21: 301-308.
Royal, C. (2005). “A Meta-Analysis of Journal Articles Intersecting Internet and Gender.” *Journal of Technical Writing and Communication*, 35(4): 403-429.
Tomasello, T. K. (2001). “The Status of Internet-Based Research in Five Leading Communication Journal, 1994-1999.”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8(4): 659-674.
Wallace, F. M. (1992). *Meta-Analysis: Qualitative Methods for Research Synthesi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Wimmer, R. D., & Dominick, J. R. (2000).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Belmont: Wadsworth.